

일본의 인구 고령화, 재정문제 및 연금 개혁

Special Feature

Sagiri Kitao (일본 게이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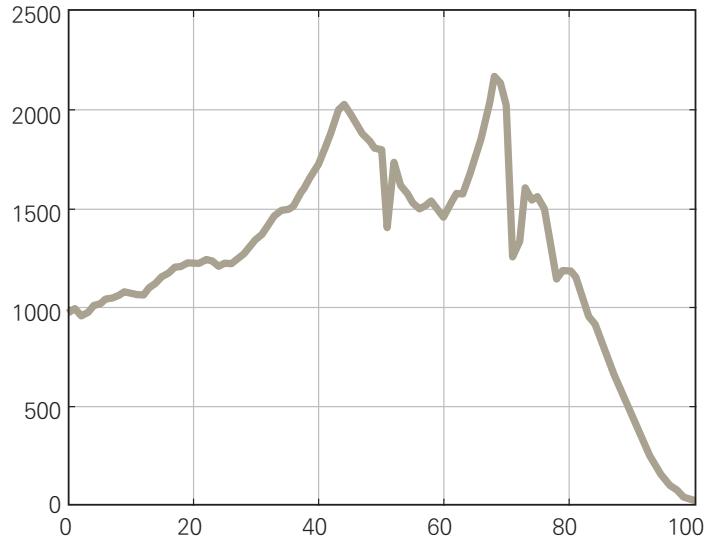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100여 년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일본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국가의 경우라면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일본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 연금제도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 전후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령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다. 45세 전후 연령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다. 3차 베이비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생아 수는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50년에는 3.0명이 넘었으나 1972년에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 이후 출산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심지어 1990년대 이후로는 1.5명 미만으로 하락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인구문제 연구소(IPSS)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65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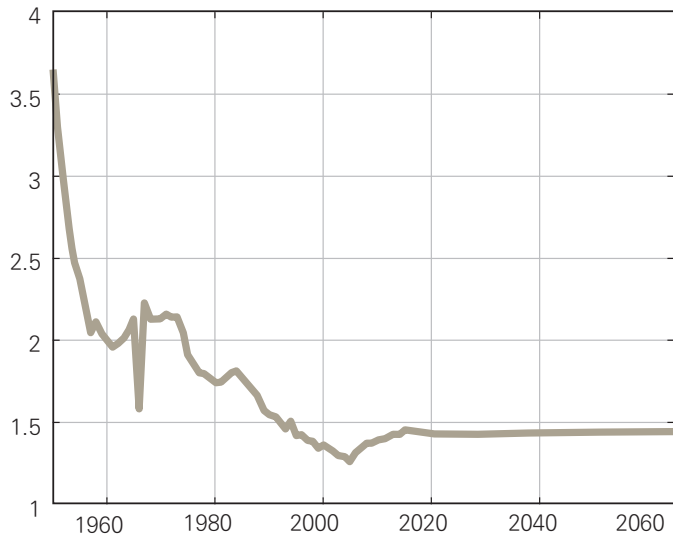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2017년 기준)

(단위 : 천 명)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2017).

[그림 2] 일본의 합계출산율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2017).

명보다 낮은 수준 머물러 있을 것이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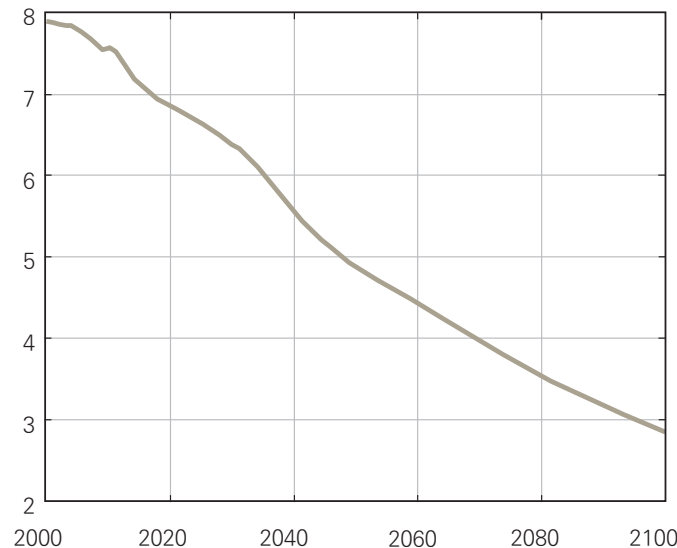
현재의 인구구조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중 한 가지는, 일본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3]은 일본의 20~64세 생산가능인구 추계를 보여준다. 2000년에는 8천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50년에는 5천만 명을 기록하고 21세기 말에는 3천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이미 지금도 세계 최장수국에 속하는 일본인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율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몇십 년간 급등할 전망이다. 또한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저조한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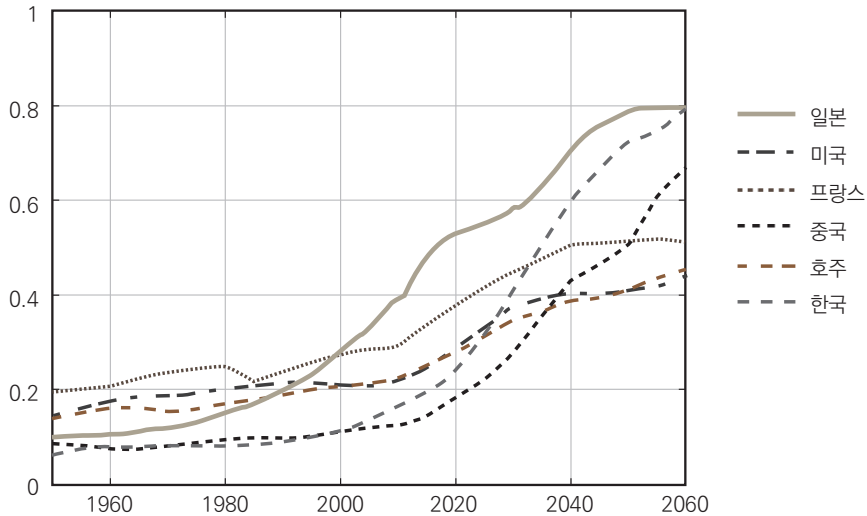
물론 개인의 복지 향상이 목표라면, 수명 연장이나 심지어 인구 감소 자체도 전혀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지급 수준이 높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사회보

[그림 3] 생산가능인구(20~64세)

(단위 : 천만 명)



[그림 4] 노년부양 비율(65세 이상 인구 ÷ 20-64세 인구)



자료 : UN 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7), 일본의 경우는 IPSS(2017).

장제도와 결합되는 경우 정부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과 같은 노령보장제도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도 증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각종 과세 기반 소득 및 소비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위한 투입이 감소해서 부양책이 필요한 경우에, 과세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왜곡시킨다.

고령화로 인해 일본 경제가 직면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환(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인한 결과들을 이해하고 정량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과 잠정적 연금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대 중첩형 동태적 일반균형모델(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overlapping generations)에 기초한 필자의 연구 프로젝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행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앞으로 일부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개혁이 실행되고 그러한 개혁이 어떠한 구조를 띠게 될지는 대체로 불확실하다. 필자는 개혁의 지연과 개혁의 시기 및 구조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 일본의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초 목표는 일본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과,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납부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 등이 개혁 조치에 포함되었다. 급여수준 인하의 경우에는 실제 인구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여 작동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급여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연금 급여수준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 변동 이상으로 명목상 감소하지 않도록 물가가 크게 인상된 경우에만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저인플레이와 때로는 마이너스 인플레이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년간 급여수준을 낮추지 못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급여를 조정하지 않도록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었다. 그 결과 2004년에 개혁이 단행된 이후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발동된 경우는 2015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 연금 개혁 이후에도 기대했던 연금 급여수준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따라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20% 감소하게 된다.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두 종류가 있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다. 기초연금은 후생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개인이 월정액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1961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변함 없이 65세이다. 후생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처음에는 55세였으나 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65세이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표 1>은 공적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일부 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상 일반 정년과 기대수명을 나타낸다. 다른 여러 국가의 경우에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일본과 동일하게 65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이 현재 대부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에서 개혁이 완료되고 일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가장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낮으면서 기대수명은 가장 긴 국가가 될 것이다. 즉 일본이 예상 연금수급 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현재의 연금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표 1>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국가	총소득대체율(%)	순소득대체율(%)
일본	35.1	40.4
호주	44.5	58.0
캐나다	36.7	47.9
프랑스	55.4	67.7
독일	37.5	50.0
영국	21.6	28.5
미국	35.2	44.8

자료 : OECD(2015).

<표 2>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기대수명

국가	연금수급 개시연령		기대수명
	현재	향후	
일본	65	65	83.3
호주	65	67	82.1
캐나다	65	67	81.8
프랑스	65	67	81.9
독일	65	67	80.7
영국	65*	67	80.5
미국	65	67	78.9

주 : * 영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14년 기준으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62.5세임.

자료 :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OECD(2015), 기대수명은 UN(2015).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결과와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재정문제들을 감안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 검토는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소개할 연구 프로젝트에서 필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상향조정하는 개혁을 가정한다. 또한 이행기의 조정비용(transitional adjustment cost)을 줄이기 위해 개혁이 완료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단계적 개혁을 전제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개혁 시작 시점에 대해서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라 이행기의 동학(transition dynamics)을 시뮬레이션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개혁 지연으로 인한 후생효과가 여러 세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향후 시행될 개혁의 시기와 구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델을 만들었다.

■ 고령화 비용과 개혁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최근 일본의 인구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이 미치는 영향과 현행 연금제도 개혁의 다양한 잠정적 결과를 연구한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Hansen & Imrohroglu(2013)는 정부 재정지출과 사회보장급여 증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신고전학과 성장 모델을 수립하였다. 두 저자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 소비세를 인상해서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면 소비세율은 최대 5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Braun & Joines(2015)는 가구별 의료비 지출과 공적의료보험 지출을 통합하는 세대중첩모델(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일본의 마이크로 데이터와 매크로 데이터를 보정하여 사용하였고, 저자들은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부채는 2040년 이전에 지속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며 그 시점에 예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비세율이 약 50%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Kitao(2015)는 미국에서 인구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Kitao(2014)의 모델을 확장하고, 이 모델을 일본 데이터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기타오의 논문은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비용을 정량화하고 공적연금 개혁의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모델에는 공적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보험은

공적연금과 함께 향후 몇십 년간 정부 재정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모델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소비, 저축 및 노동공급에 있어 참가여부(extensive margin)와 참가수준(intensive margin)을 결정하게 된다. 연령별 임금률(wage rate)은 일본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정하여 활용하였고, 노동시장 참여의 효용비용(utility cost)은 노동공급의 생애주기 패턴과 노동시장 퇴장 시기에 맞추어 설정되었다.

연구 결과, 정부가 예산균형 유지를 위해 매년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면 2060년대 초반에는 소비세율이 45%를 초과하고 곧이어 최대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 증가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연금과 의료보험이다. 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지출 비중은 2010년을 기준으로 약 10%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년부양 비율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두 배로 늘어나면, 2080년에는 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지출 비중이 약 20%로 증가하게 된다. GDP 대비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비중은 2010년의 경우 약 6%였으며, 이 또한 2070년대에 이르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극도로 심각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노동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하락하면서 과세 기반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공적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지출을 외생변수로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이행기의 동학(transition dynamics)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렇게 되면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소비세율은 최대 약 12%에 불과하게 된다. 연금 급여만을 외생변수로 GDP 대비 비중을 10%로 고정한다면, 소비세율은 최대 약 25%가 되는데, 이는 앞의 12%보다는 높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 모두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기본 시뮬레이션에서의 최대 소비세율인 48%보다는 훨씬 낮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향후 수십 년간 그리고 남은 21세기 동안 인구 전환으로 인한 재정 비용은 정부가 이러한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Kitao(2015)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대체율이(20%와 40%로) 하향 조정되어 있고 기초연금수급 개시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이 20% 감소할 때마다 재정 비용은 최대 총소비(total consumption at the peak)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감소하게 된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5년 연장되면 그에

따라 필요 세입도 유사한 규모만큼 감소한다. 개혁으로 연금제도의 보장범위는 축소되며, 이는 은퇴 후 소비지출에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 및 개인저축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을 통해 청년층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인구 전환의 재정비용은 줄어들고 이들의 후생은 증진된다. 이는 왜곡적 과세(distortional taxation)로 인해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은 노동시장 퇴장 시점에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총자본 및 총노동공급은 개혁이 없는 기본모델(benchmark model)에서보다 증가하며 산출량도 더 늘어난다. 개혁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이 모두 증가하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많이 증가한다. 자본-노동 비율(capital-labor ratio)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 부족이 심화된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임금은 상승하고, 이는 청년층 및 미래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근로의욕을 높이는 추가적인 동기가 된다.

■ 개혁 시기의 중요성

Kitao(2017a)에서, 필자는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여 개혁의 시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 낮추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개혁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개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조정은 30년에 걸쳐 완성된다. 개혁은 2020년, 2030년, 2040년 중 가능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궁극적으로, 개혁이 완료되고 경제가 안정되면 경제는 전과 같이 정상(steady)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행 과정은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개혁의 시기가 빠르면, 개인은 자신의 은퇴자금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에 더 일찍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직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저축할 것이다. 따라서 총자본 및 총노동공급 증가가 개혁이 지연되는 경우보다 더 빨리 시작된다. 자본증가가 노동공급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혁이 일찍 시작되면 임금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이는 이행기 동안 생산가능연령대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개

혁이 10년 지연될 때마다 총자본은 최대 3% 감소하며 경제활동과 노동수요도 감소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줄어들었으며 필요한 국세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인구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비용은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혁이 가장 늦은 시기인 2040년이 아니라 2020년에 시작하는 경우, 필요한 소비세율(required consumption tax)로 환산한 재정 부담은 최대 8%포인트 감소한다.

■ 미래 연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현재의 부과방식 연금제도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을 포함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개혁의 정확한 시작 시점과 그 구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Kitao(2017b)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Kitao, 2017a)를 확대하여, 정책적 불확실성을 세대중첩형 동태적 일반균형모델(general equilibrium model of overlapping generations)에 포함시켜 개혁 시기 및 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전의 연구인 Kitao(2017a)에서는, 개인들이 개혁 시작 시기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생애주기별 소비, 저축 및 노동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언제 바뀌어도, 소비, 저축 및 노동공급에 예상치 못한 원치 않은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Kitao(2017b)에서는 개인이 미래 어느 시점에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시기와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마침내 개혁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정보가 없었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필자가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개인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이 향후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개혁이 2020년과 2040년 사이에 시작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2020년, 2030년 또는 2040년에 개혁이 실시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단 개혁이 시작되면 연금급여 조정은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에 개혁이 바로 그 해에 실시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개인은 즉시 저축과 일을

더 늘리기 시작할 것이다. 반면에 개혁이 지연될 것을 알게 되면,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고 일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개인은 개혁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에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겠지만, 확실하게 2020년에 개혁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만큼 많이 저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이 시작되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소비를 줄임으로써 즉시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이 시작되지 않으면, 거의 저축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저축해 놓은 자금을 소비한다. (개혁이 2020년이 시작되지 않았고) 2030년 또는 2040년에 개혁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2030년에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혁이 지연되면 총자본과 총노동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임금도 낮아져, 이행기 동안 생산가능연령대의 개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며, 이와 함께 연금도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연금 지출도 늘어난다.

이 논문에서는 개혁 지연과 개혁 시기 및 구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후생비용(welfare cost)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후생효과는 소비등가변환(consumption equivalent variation)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기본모델경제(benchmark economy)와 불확실성이 있는 다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생손실(또는 편익)이 보전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소비의 백분율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후생 관련 수치와 소비등가(consumption equivalence)로 표현된 후생 변화 수치는 어느 경제와 정책 시나리오를 기본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필자는 개혁이 불확실성 없이 2020년에 실시되는 경제를 기본모델로 삼았다. 30대 중반 이후의 개인은 개혁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경제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그보다 젊은 미래세대는 개혁이 불확실성 없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희망한다. 개혁이 지연되면 특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와 60대가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이행기 동안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높은 연금급여 수준으로 인한 이득이 그러한 손실을 상쇄하기 때문에 결국 순효과는 양으로 나타난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개혁이 지연되면 훨씬 더 장기간 세금 부담이 늘고 임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한다.

개혁이 불확실성 없이 2030년에 실시되는 경제를 기본모델로 사용한 경우, 후생효과 측정은 개혁 지연의 영향보다는 불확실성 자체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필자가 고려한 개혁 시기가 불확실한 시나리오에서 2030년이 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

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개혁에 불확성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한 일련의 세금 납부로 인하여 개인의 소득 및 지출과 관련하여 추가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예산 제약에 특이한 충격 요인들이 증가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별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순소득 변동에 대비하여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이에 따라 총자본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지며, 일반균형효과로 인하여 임금은 상승한다. 중년 및 이후 연령대의 개인은 은퇴에 대비해 적립해 놓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후생손실(welfare loss)을 입게 되는 반면에, 젊은 세대에서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편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에서는 일반균형효과와 이자율 및 임금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가 중대한 인구변화, 재정정책 및 재분배정책과 같이 중요한 환경변화를 거치는 경우, 균형효과를 배제하고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적 자원을 재배분하면 정책변화의 효과와 다양한 개혁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확하게 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맺음말

최적의 연금정책 또는 전반적인 재분배정책 및 세대에 걸친 정책(intergenerational policy)을 고려함에 있어, 하나의 정책 방안이 우리, 즉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이들과 미래세대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충관계(tradeoffs)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행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지연되면 정부의 예산 불안이 가중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증가되어, 향후 경제성장 및 개인의 후생에 해가 될 것이다.

일본의 투표 연령은 2016년 선거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젊은 미래세대의 의견과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생각하는 자애로운 정부

라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필요한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납득시켜야 한다.

불확실성은 경제적 비용과 후생 비용을 증가시킨다. 개인 및 기업의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며, 예방적 활동(precautionary action)은 경제활동 및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본이 현재 직면한 인구 전환의 상황에서, 현 경제에 속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전체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되는 효과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비전과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향후 연금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혁이 지연 없이 실행되면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는 분명히 그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Braun, A. R. and D. H. Joines(2015), “The Implications of a Graying Japan for Government Policy,”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57, pp.1-23.
- Hansen, G. D. and S. Imrohorglu(2016), “Fiscal Reform and Government Debt in Japan: A Neoclassical Perspectiv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1, pp.201-224.
- Kitao, S.(2014), “Sustainable Social Security: Four Option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7(4), pp.756-779.
- _____(2015), “Fiscal Cos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54, pp.37-58.
- _____(2017a) “When Do We Start? Pension Reform in Aging Japan,” *Japanese Economic Review* 68 (1), pp.26-47.
- _____(2017b), “Policy Uncertainty and Cost of Delaying Reform: A Case of Aging Japan,” Working Paper.
-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2015.”